

□ 일본 중산층의 붕괴와 格差사회 형성

- 일본형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시사점 -

1. 일본의 '格差社會' 탄생

○ ('1億總中流社會'의 형성) 일본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1960년대 초반에는 '中流'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이른바 '1億總中流社會'를 달성했음

- ('1億總中流社會'의 개념) 일본 총리부가 1958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본 국민의 90%가 평균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나온 개념임

· '中流'의 개념: 中流란 同 조사의 '당신 가정의 상대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의 세부항목 가운데 '下'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을 총인구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를 말함

· 90% 이상이 中流: 최초 조사인 1958년에는 '下'의 응답 비중이 17%에 달했으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그 비중이 차차 감소, 1964년에는 8.5%를 기록하여 '中流'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음

· 1억 명 이상이 中流: 위의 조사결과를 총인구 규모에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 국민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中流'에 속하게 되어, 이른바 '1億總中流社會'가 탄생함

○ ('格差社會'의 탄생)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1億總中流社會'가 위기를 맞음과 동시에 '格差社會'가 도래함

- ('格差社會'의 개념) 격차사회란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로 소득격차 뿐 아니라 이로 인해 '1億總中流社會'가 해체되는 이른바 '中流'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양극화 현상임

· '中下' 이하 계층 확대: 1996년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中下' 이하 계층의 비율이 28.2%였으나, 2006년에는 33.6%로 5.4%p(상승률은 19.2%) 상승, '1億總中流社會'가 위기에 직면했음<sup>1)</sup>

- '1億總中流社會'의 위기: 더욱이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에는 '下'로 응답한 계층의 비율이 10.4%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9.6%로 1964년 이후 줄곧 8%대 이하를 지켜오던 '下' 계층이 증가하여 '1億總中流社會'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 '格差社會'의 가시화: 한편 '中中'으로 응답한 계층의 비율은 1996년 57.4%에서 2004년 52.8%로 4.6%p 감소하여 중류층이 붕괴되기 시작함으로써 '格差社會'가 가시화되고 있음

## 2. 일본의 '格差社會' 탄생 원인과 현상

- ('格差社會' 탄생 원인) 1991년 버블붕괴에 의해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돌입함으로써 실업률의 상승,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에 의해 각종 소득격차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格差社會'가 탄생됨
  - (경기침체의 지속) 일본 경제는 1991년 버블붕괴 이후 1993년 -1%, 1998년 -1%, 2001년 -1.2% 등 총 3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아직도 완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실업률 또한 1991년 2.1%에서 2004년 4.7%로 급증하여 소득 악화를 가져옴
  - (고령화·저출산 현상 심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5년 7.9%에서 2004년 19.5%로 급증한 반면, 출생률은 1956년 2.2에서 2003년 1.29로 급감하여 일본 전체의 종속인구(피부양인구 비율) 지수를 상승시켜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sup>2)</sup>
  - (각종 사회구조 변화) 한편 가족형태의 변화, 청년층 단신세대 및 고령자 단독세대의 증가, 富와 교육의 대물림 현상 심화 등도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1) 동 조사의 시기별 응답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上', '中の 下', '下'는 1991년 버블붕괴 후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中の 上', '中の 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수준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日本 総理府, 「国民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 각 년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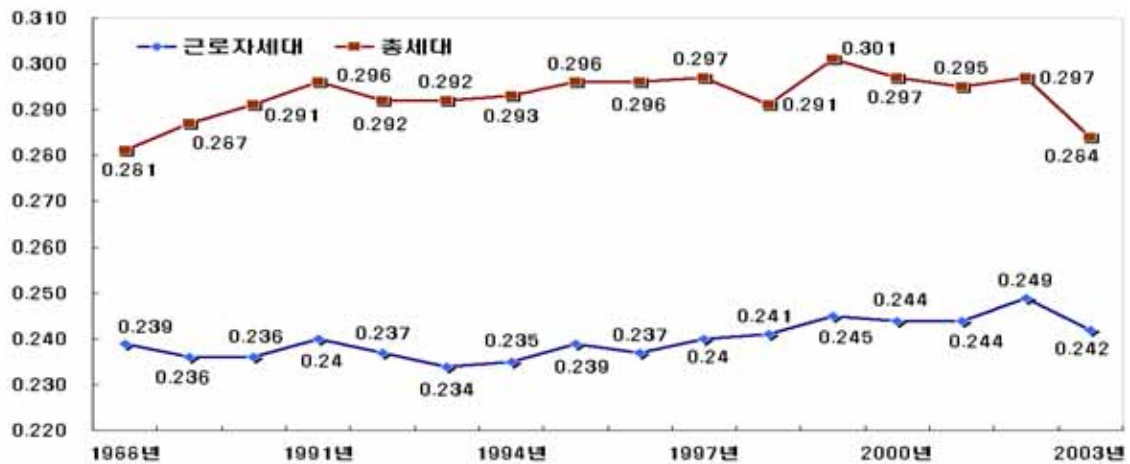
2) 종속인구지수란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0~14세 인구의 합계를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일본의 경우 2030년에는 이 지수가 70을 초과함으로써 3명이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日本 内閣府, 「高齢社会白書」, 각 년도 참조.

○ ('格差社會' 현상) 일본은 소득격차 및 기업 내 임금격차의 확대, 소득계층 및 사회계층의 고착화 등 '格差社會'를 상징하는 각종 현상들이 나타남

- (소득격차 확대) 일본의 근로자세대 및 총세대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 간 노동소득 또한 상승하고 있어 소득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소득분배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하락했지만, 총세대 및 근로자 세대의 지니계수가 지속적인 상승 국면에 있어 소득분배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 한편 젊은 세대(남성 고용자)일수록 지니계수의 변동 폭이 커 세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지니계수 변동 현황 >



자료: 日本 総務省, 「家計調査」.

< 연령별 고용자의 지니계수 변동 (남성 고용자) >

구 분	고용자		정규직 고용자	
	1997년	2002년(변동 폭, %)	1997년	2002년(변동 폭, %)
20~24세	0.191	0.221 (15.7)	0.163	0.168 (3.1)
25~29세	0.184	0.204 (10.9)	0.164	0.174 (6.1)
30~34세	0.194	0.216 (11.3)	0.178	0.193 (8.4)
35~39세	0.215	0.234 ( 8.8)	0.198	0.210 (6.1)
40~44세	0.238	0.253 ( 6.3)	-	0.229 (-)
45~49세	0.260	0.271 ( 4.2)	0.241	0.244 (1.2)
50~54세	0.283	0.295 ( 4.2)	0.262	0.262 (0.0)
55~59세	0.316	0.327 ( 3.5)	0.283	0.283 (0.0)

자료: 総務省, 「就業構造基本調査」, 각 년도; 太田 清, 「日本の経済格差は広がっているのか」, 経済セミナー, No.5, 2005년8월.

- (기업 내 임금격차 발생<sup>3)</sup>)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 내에서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자 전체의 지니계수가 정규직 고용자보다 훨씬 높고, 변동 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규직 (남성): 또 정규직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여전히 소득분배 불균형 정도가 심하나, 지니계수의 변동 폭을 보면 3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30대의 변동 폭이 40대 이상 세대보다 커 이들 세대들 간의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소득계층의 고착화) 일본의 가계경제연구소의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소득별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음
  - 1년 후 소득계층 변화율 감소: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30대 후반~40대로 배우자가 있는 계층의 계층 간 유동성에 대해 전체 평균으로 보면 1993년 46%에서 2001년 33%로 유동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계층 간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음

< 소득계층 변화율 >

구 분	전체 평균	하위 20%	상위 20%
1993년	46%	37%	32%
2001년	33%	28%	15%

자료: 家計經濟研究所, 「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 각 년도; 太田 清, 「日本の經濟格差は広がっているのか」, 經濟セミナー, No.5, 2005年8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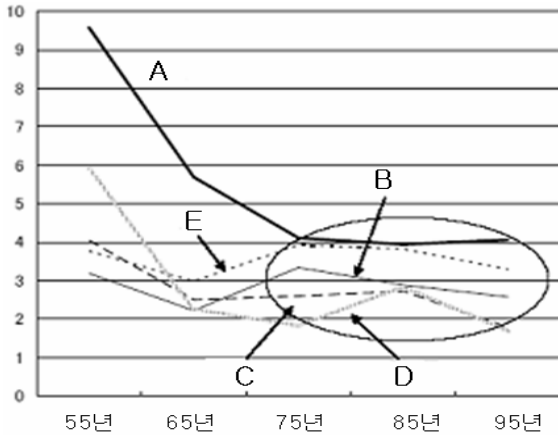
3)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경우 성과주의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성과주의임금 적용률이 임금 총액의 50% 이상)의 최저 임금과 최저 임금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차 확대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남. 日本 内閣府, 「企業行動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각 년도 참조.

- (사회계층 고착화) ‘格差社會’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은 연도별로는 사회 계층의 유동성이 침체되고 있으나, 세대별 추이를 보면 전문직·관리직의 부모 자식 간 직업 계승도가 1936~1955년 세대에 들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직업군의 직업 고착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연도별로는 전체 사회의 유동성은 정체: 부모 자식 세대 간 직업 계승성을 나타내는 오즈비율 (Odds Ratio)<sup>4)</sup>은 고도 성장기에는 하락세를 보여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계층에서 정체되고 있음(아래 그림 i) 참조)
  - 상류계층은 오히려 상승: 한편 전문직·관리직, 사무직·판매직, 자영업자 직업군을 보면 1926~1945년 출생자들까지의 오즈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1936~1955년 출생자들의 오즈비율이 상승하여 이 직업군의 사회계층 고착화 정도가 심화됨(아래 그림 ii) 참조)
  - 반면 기술직 및 비기술직 블루컬러 직업군의 1936~1955년 출생자의 오즈비율은 전 세대의 오즈비율보다 하락하여 이 직업군의 사회계층 고착화 정도는 완화되고 있음
  
- 결국 상류층의 사회계층 고착화는 블루컬러 등 하위계층의 계층이동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전체 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格差社會’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사회계층을 ‘分斷化’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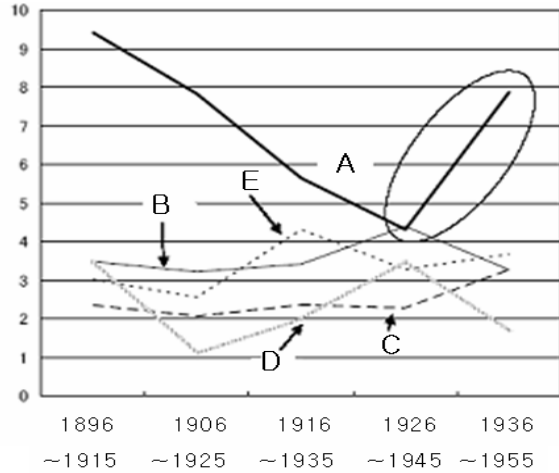
4) 자식세대가 얼마만큼 부모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이 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 계승도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냄. 다시 말해 오즈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동성이 낮아져 사회적 유동성이 악화된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오즈비율 변동 현황 >

i) 연도별 오즈비율 추이



ii) 세대별 추이



자료: 日本 税制調査会, 「第9回 基礎問題小委員会 資料」, 2004年3月30日.

- 주1. A는 경영자 및 임원을 포함한 전문직·관리자, B는 기술직 블루컬러 C는 사무직·판매직, D는 비기술직 블루컬러, E는 모든 자영업자인 경우의 오즈비율.
2. A의 오즈비율은, (부모와 자녀 모두 A/부모는 A이나 자녀는 A 이외)/(부모는 A 이외이나 자녀는 A/부모와 자녀 모두 A 이외)로 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직업이 A로 본인 또한 A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냄.
3. 그림 i)의 조사년도, 그림 ii)는 자식세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오즈비율의 추이를 나타냄.

3. 일본 사회계층의 '分斷化'와 그 특징

○ (新分斷層<sup>5)</sup> 탄생) 格差社會의 도래와 사회적 유동성 둔화는 종래의 상류, 중류, 하류라는 계층의식을 파괴하고 New Celebrity, 벼락부자, 슈퍼 샐러리맨, 新빈곤층 등의 새로운 계층 분화 즉 '新分斷層'을 탄생시킴으로써 일본의 사회계층을 '分斷化'시킴

- (New Celebrity; 신부유층) 인터넷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함
  - New Celebrity: Celebrity란 원래 각개 각소의 저명인사를 말하며 지금까지 비교적 계층의식이 약했던 일본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기업 사장 등을 칭하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新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한 사장 등을 New Celebrity라고 함

5) 新分斷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日經ビジネス, 2005年 7月 18日号를 참조.

- 인터넷 시장의 급성장: 일본의 인터넷 시장 규모는 1998년 645억 엔에서 2004년 5조 6,430억 엔으로 급성장함
  - 주식시장 상장 연령 감소: 일본의 벤처기업 상장시장인 자스닥의 경우, 주식시장 상장까지의 평균 소요 연수는 1995년 35.8년 (공개시 사장 평균 연령 57세) 에서 2004년 23.2년 (동 53세) 으로 12.6년 감소됨
- (벼락부자) 생활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노력해오던 Rat Race에서 탈출하여, 창업하거나 투자자로 변신하여 벼락부자가 된 새로운 부유층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음
- Rat Race로부터의 탈출: Rat Race란 격심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뜻하는데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종신고용 등 ‘일본형 고용관행’이 붕괴되면서 고용 환경의 악화와 동시에 극심한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 생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Rat Race에서 탈출하려는 자가 증가하게 됨
  - 새로운 부유층의 탄생: 생활의 불확실성 증가는 결국, 일반 근로자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 소규모 자본과 인원으로 고수익 (불로소득) 을 창출하거나, 창업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새로운 부유층 즉 벼락부자를 탄생시킴
- (슈퍼샐러리맨)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는 또 다른 면에서는 기업 내부에 適者生存의 원리를 가져와 사내 슈퍼샐러리맨 또는 ‘하이포族 (HIPO)’ 출연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내에서도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슈퍼샐러리맨: 샐러리맨 가운데 초고수입을 얻고 있는 슈퍼엘리트를 칭하는데, 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의 2005년도 연봉은 2억 8,800만 엔으로 토요다나 혼다의 8배에 이름
  - HIPO族: HIPO란 High Potential Person의 준말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향후 기업의 경영자 층이 될 인재들을 칭하는 말로써,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의해 ‘경쟁’과 ‘업적’을 통해 평가받는 HIPO族과 같은 엘리트층이 사내에 등장함

- 사내 계층 분화 진전: 닛산의 경우, 이들 HIPO族은 과장급을 중심으로 젊은 부장과 대리 사원까지 약 500명이 선발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성과 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일반사원과는 전혀 다른 커리어 패스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내 계층 분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新빈곤층)한편 장기 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프리터', '니트족' 등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함
  - 프리터 (Freeter): 프리터는 Free와 Arbiter의 합성어로 정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15~34세 청년을 지칭하는 데, 1992년 101만 명에서 2003년에는 217만 명으로 증가했음
  - 니트족 (NEET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이란, 평소 학교에도 다니질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지 않은 청년 무직자를 말하는데, 2002년에는 84만 7천 명에 이름
  - 한편 프리터의 연평균 수입은 140만 엔에 불과해 이들의 증가는 새로운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니트족의 증가 또한 새로운 빈곤층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1) 시사점

- (시사점) 한국의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블붕괴 이후 나타난 일본의 '分斷化' 요인 및 현상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함



< 韓日 ‘分斷化’ 현상 비교 >

구 분		일 본	한 국
소득격차	전체	- 지니계수 상승 • 총세대 및 세대 간	- 지니계수 상승 • 1997년 0.283→2004년 0.310 • 소득 5분위 배율: 2002년 5.18→5.41
	기업 내 임금격차	- 지니계수 상승 • 정규직 비정규직 간 소득분배 격차 확대 • 20~30대 임금격차 확대	- 직종별, 학력별 임금 격차 확대 - 정규직 비정규직 간 소득분배 격차 확대
	소득계층의 고착화	- 소득계층 변동률 감소 • 상위 소득계층의 변동률 급락	- 비교 자료 없음
사회계층의 고착화		- 부모자식 세대 간 직업계승도 상승 • 전문직 및 관리직은 자식세대가 40세가 되었을 때 급상승 • 사회적 유동성 둔화 - 부모세대의 富와 교육의 세습	- 1990~2000년 부모 세대 직업별 세대 간 직업계승도 상이 • 정신근로자의 직업계승도 상승 • 농민 및 육체근로자의 직업계승도 하락 • 단 자식세대의 직업이동은 정신근로자에 집중 - 부모세대의 富와 교육의 세습 • 2005년 2/4분기 최상위층의 사교육비는 최하위층 사교육비의 8배
新分斷層	신부유층	-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분야의 주식 시장 상장을 통해 성공, 계층 이동	- 벤처 창업과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성공, 계층 이동 • 창업평균연령: 41.2세(1999년 기준)
	벼락부자	- 창업 또는 투자자로의 변신을 통해 계층 이동	- 창업 또는 투자자로의 변신을 통해 계층 이동
	슈퍼 샐러리맨	- 일본형 고용관행 붕괴에 의해 발생된 계층 • 사내 계층 분화 촉진제	- 전문경영인과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액연봉자 • 2003년 기준 31,000명
	프리터	-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청년층 • 2003년 217만 명 • 월평균 급여 114만 3천 원	-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청년층 • 월평균 급여 83만 7천 원
新貧困層	니트	-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 • 2002년 84만 7천 명, 연평균 수입 140만 엔	-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 • 2003년 17만 4,600명, 2015년 85만 3,900명 (추정)

자료: 인크루트, www.incruit.com;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도 NEET족 늘고 있다’, 2005년; 차종천,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추세: 1990~2000’, 사회학대회, 2001년; 국세청; 통계청.

2) 대응 방안

- (경기활성화) 일본의 소득분배 악화는 버블과 그것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한국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의 증대와 분배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함

- 전체 후생 수준 향상: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전체 후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신부유층 탄생 지원: 창업 환경 개선 등 새로운 부유층 탄생 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임
-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 필요) 일본의 소득분배 악화는 실질적으로 고령화 현상,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질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 대응책 필요)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고령자 소득원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를 방지해야 함
    - 일본은 고령화 현상에 의해 소득분배 악화: 勇上和史 (2003)<sup>7)</sup>에 의하면 전세대 과세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1985년 0.364에서 0.395로 8.5% 증가했는데 반해, 세대주의 연령구성비를 1985년으로 고정시켰을 경우 지니계수는 0.372로 2.2% 상승에 그침
    - 고령자 소득원 창출 및 저출산 현상 방지 필요: 따라서 고령자의 수입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르는 국가 전체의 부양 능력 하락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가족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한편 가족형태의 변화 또한 소득분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 및 새로운 가치관 확립이 필요함

6) 일본형 장기불황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등에 대해서는 ‘일본형 장기불황 정부정책 실패가 원인’, 등 현대경제연구원 의 각종 자료를 참조.

7) 勇上和史, 「日本の所得格差をどうみるか; 格差拡大の要因をさぐる」, JIL労働政策レポート, Vol.3, 2003年 3月.

-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르는 소득분배 악화: 한편 만혼화, 미혼화, 핵가족화 등의 진전에 의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계 소득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또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줌<sup>8)</sup>
- 각종 결혼 및 육아 장려책 및 새로운 가치관 도입 필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르는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결혼 및 육아를 장려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함

○ (사회적 유동성 촉진) 최근 일본은 교육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분배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 또한 이러한 경향이 강해 사회적 유동성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교육을 통한 사회적 유동성 촉진 필요) 사회적 유동성 촉진을 위해서는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한 교육과 그에 따르는 부의 세습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교육비 양극화) 통계청의 2005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최상위 10%가 월평균 29만 2천원, 최하위 10%가 3만 6천원을 지불했으며, 결국 이러한 사교육비 양극화가 교육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적 유동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 (교육 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유동성 촉진) 사교육비 지출의 과도한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기능 강화를 통한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의 사회 진출 촉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교육 체계 확립 등 교육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함

이부형 연구위원(3669-4011, lbh@hri.co.kr)

8) 29세 이하 세대의 지니계수 변동을 살펴보면 1985년에 0.302에서 1996년에 0.360으로 19.2% 상승했으나, 세대 구성비를 1985년으로 고정했을 경우 지니계수는 0.342로 13.2% 상승에 불과하여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가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음. 勇上和史(2003年), 동상서.